

[사설]대전문화재단, 민간주도 예술행정 닷 올렸다

2009년 11월 06일 (금)

충청투데이

민간주도 예술행정을 담당할 대전문화재단이 오늘 창립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관 주도의 문화예술 행정에서 탈피,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예술행정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전문가 그룹이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더 많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정책들이 발굴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는 것도 그래서다. 반면 내재돼있는 지역 문화예술계의 갈등을 슬기롭게 풀어야하는 등 극복해야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전지역 문화예술 정책은 관의 주도로 이루어져,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해왔다. 전문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소통 부족 등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다보니 지역문화예술계는 그들대로 불만이 높았으며, 시민들 또한 생산자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문화예술계가 현재 갈등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런 이유에 기인한다. 관은 관 나름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수많은 단체들과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고충이 컸을 것이다. 민간 거버넌스 형태인 대전문화재단이 해결해야할 과제들이다.

문화재단 출범으로 기금조성과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다고 한다. 기업들의 협조만 있다면 그동안 소외됐던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토대로 대전지역 문화예술계가 활기를 띠면 더 이상 바람직한 것은 없다 하겠다. 기업들이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많은 후원금을 낼 수 있기를 당부한다. 여기에 문화재단이 시민들의 문화향수권 강화, 예술인 교육, 문화예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준비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기금의 공정한 집행,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사업 등 취약했던 부분에 대한 보완도 시도하겠다고 하니 여간 다행스런 게 아니다. 문화의 균형발전을 기대해볼 만하다는 평가가 나올 만하다.

문화재단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 자리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다. 지역문화인 및 시민들의 협조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야심차게 출발한 문화재단이 암초에 부딪칠 지도 모른다. 서로 양보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문화재단도 그동안 야기됐던 지역문화예술계의 문제점들을 거울삼아야 한다. 폭넓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전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시키는 진정한 문화기구로 우뚝 솟길 바란다.